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벽돌도 차가니와 인심도 아나보다/ 격장천리 소식이야 알뜰맞듯 하다가는 /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내 가슴이 아파라”

인권 변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병린(1911~1986) 변호사가 지은 ‘양심수’라는 제목의 시조다. 높은 담장으로 하여 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양심수를 걱정하는 인권 변호사의 애뜻한 마음이 아련하다.

74년 인권변론 시대의 출발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에 맞서 양심수와 정치범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구조 활동을 벌인 일단의 변호사들을 가리킨다. 인권 사건의 수임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른다. 정보 정치의 작동에 의해 돈 되는 사건의 수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정보기관에 의해 협박과 공갈, 도청과 미행, 연금과 연행, 나아가서는 구속까지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인권 사건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요 투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유신정권은 이른바 민청학련을 기념한 간접조치 4호

법정의 애국가

를 발동, 당시로서는 해방 이후 최대라 할 수 있는 1204명을 연행, 180여 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학생들의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받아 주는 변호사들이 없었다. 당시 황인철(1940~1993) 변호사 사무실에 사법연수원생으로 실무 수습차와 있던 이우근으로부터 유인태와 이철의 변론을 맡아 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을 듣고, 황 변호사가 동기 변호사들에게 호소하여 임광규·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론을 맡기 시작한 것이 ‘인권변론 한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75년 김지하가 반공법 위반 기도 사건에 조준희(1938~2015)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의 ‘인권 변론 4인방’이 형성되었다. 상호 간에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돈명 변호사는 연치가 높아 망형 노릇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의 변론을 자청해서 맡았고, 조준희 변호사는 변론이 감정에 흐르는 것을 막는 그 중앙의 위치를, 황인철 변호사는 대외 협력과 기록 관리 등 총무의 역할을, 홍성우 변호사는 변론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일을 각각 맡아서 맡았다.

법정 안팎에서 호흡이 아주 잘 맞아서 1980년대에 정법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생기기 전까지 이들이 인권 변론이라는 무거운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떠맡았던 것이다.

인권 변론과 관련한 애환도 많았다.

이돈명 변호사가 이부영을 당선 집에 숨겨 주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법조사상 최대 규모인 289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가톨릭농민회원이었던 오원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서 쓴 그 자신의 양심선언을 법정에서 뒤집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황인철 변호사는 바다에 퍼질래야 평평을 울었다. 조준희 변호사가 조선일보를 들고, 황 변호사가 동기 변호사들에게 호소하여 임광규·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론을 맡기 시작한 것이 ‘인권변론 한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홍성우 변호사 패유를 빌며

‘신동아’ 1975년 1월호에 ‘법정의 애국가’라는 제목의 홍성우 변호사의 글이 실렸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1974년 9월 28일, 국방부 내 비상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소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20여 명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군법회의 심판부가 임정하여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하자 기립해 있던 학생들은 일제히 비장한 음성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며 애국가를 봉창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애국가 봉창이 시작되자 돌연 해고한 사건이 벌어졌다. 앞에서 개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아우성을 치며 손으로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기 시작한 것이다.”

홍 변호사의 글은 계속된다. “애국가를 부르는 학생들과 그 입을 틀어막는

교도관들의 손과 닳지라는 아우성... 손으로 막고 밀치고 소리치는 통에 법정은 수라장이 되고 막는 손을 피해 가며 학생들이 애국가를 계속하자 재판장은 학생들 전원을 퇴정시킬 것을 명령했고, 그 뒤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모두 퇴정당하고, 방청하던 학생 가족들과 신문기자들마저 모두 퇴정당한 가운데, 행하니 빈 법정에서 7인의 심판관과 2인의 헌병, 군법회의 직원이거나 수사기관원인 듯한 방청인 10여 명과 그리고 피고인인 학생들 대신 변호인 필자 한 사람만 변호인석에 덩그러니 앉혀 놓은 채 모두 합산한다면 도합 백수십 년은 필적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어떤 학생이었던가 법정의 최후진술에서 ‘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는 나의 설 땅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하며 말문을 맺지 못하던 것이 생각한다.”

그때 그 법정에서 섰던 학생들을 포함한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모여 얼마 전 홍성우 변호사 병문안을 갔다. 간곡한 병문안이 끝나고 인권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옆에는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따로 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을 알아본 간호사들이 합석, 병중의 홍 변호사 얘기를 나누었다. 그 뒤 이들 간호사들의 홍 변호사에 대한 따뜻한 문안 인사와 정성을 다한 간호가 홍성우 변호사와 그 가족들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재발 홍성우 변호사가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빈다.

시민들은 왜 ‘광주 집단 폭행’에 분노할까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함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공포감 때문이다. 사건 초기 경찰이 보여준 부실한 수사 역시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장기간 가라앉지 않고 있는 듯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초기 대응 장면을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폭행 사건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당시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들이 출동한 경찰들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다. 가해자들보다 수적으로 적은 출동 경찰이 가해자들이 무서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공권

력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고, 경찰이 모호한 매뉴얼에 속박돼 강력 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눈앞에서 시민이 폭행당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들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들이 무서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경찰 역시 여론이 들끓자 사건 초기보다 가해자들의 혐의를 무겁게 하는 등 뒤늦게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경찰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물론 이번 사건을 통해 대형 사고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권력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의식’을 통한 선제적 대

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장 상황을 기록할 증거용 촬영도 필요했지만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초기에 나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는 이번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도 민심이 들끓는 이유를 정확하게 성찰해보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상황 이 딱한 것과 더불어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여기에 공권력이 시민들을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실감감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하던 당시 피해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 사회는 이제 피해자만 억울하고 가해자가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제도적 방안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주체성을 갖고 선거에 임하자

시키려 하고 야당에서는 이견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진보와 보수, 정파간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핑크색 희망이 블랙홀이 되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를 검증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당간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외치며, 오직 주민들만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선전과 구호를 믿고 뽑아 주었다. 하지만 허다한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주민을 배신하고 행정에 독선과 아집으로 혼선을 빚거나 비리와 부정과 무능으로 점철되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서 자조와 한탄에 빠지곤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좋은 말로 하면 성숙된 민주제도이고, 주민들의 복지와 향상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 폐

해가 커서 일부 국민들은 기초단체 폐지나 광역단체만의 지방자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다수가 모여 집단의 힘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인구 수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대의 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로 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어떤 인물을 뽑아내는가 하는 것이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경제할 일은 그렇게 소중한 한 표를 너무 쉽게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식의 비합리적인 선거 풍조가 우려되고 있으며, 싸움이 당선을 염려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사상과 경륜, 철학 등을 세세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가 속한 정당의 정당 정책이나 신뢰도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 편승하거나 지역연고 등에 따라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의 삶과 직접 관련

있는 자치 대표를 뽑는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뤄져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하는 책무가 크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만은 참된 인물을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다시는 “발등을 짚어 버리고 싶다”거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라는 통탄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개인의 권력욕과 당리당락 차원에서 일단의 표를 얻고 보자는 심리로 포퓰리즘적 경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세운 이념과 정책,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 있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민복의 바탕에서 시작되는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존망은 필부유책(國家存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국민이 냉철한 역사적 주체성을 갖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社說

여성 후보 20%에 불과...안타까운 ‘유리 천장’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광주와 전남 지역 여성 후보는 모두 20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후보 970명 가운데 21.5%로, 5명 중 1명꼴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17.7%)에 비해 약 4%포인트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적은 수치다.

특히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와 시도 교육감 후보,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오는 여성 후보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자치단체장 후보도 광주의 경우 5개 구청장 후보 14명 모두가 남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겠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0%에 달하지만, 5급 이상 고위직은 4.5%에 그치는 현실이 곧 우리 사회의 높은 ‘유리 천장’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 할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후보 73명 중에 그나마 여성 후보는 영암 군수

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가 유일하다. 남성 집중 현상은 전남 지역 광역·기초의회 선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남도의회 후보 115명 중 여성은 5명(4.3%) 뿐이었으며 전남 22개 시·군의회의원 후보 455명 중에서도 여성은 43명(9.4%)에 그쳤다.

반면 여성 후보 비중은 비례대표 후보군에서 많았는데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12명 중 10명(83.3%), 전남도의회 16명 중 11명(68.7%)이 여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정치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 왔던 오랜 관습을 유독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낮은 이유로 꼽는다. 아직도 정치는 남성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유리 천장을 뚫기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와 여성 전략공천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혈세 낭비 ‘원격 직업 훈련’ 개선책 찾아야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진행되는 원격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허위로 실시하고 역대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또 다시 적발됐다. 원격 훈련의 제도적 한계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평생교육 시설 대표 A(51) 씨를 구속하고 이사 B(50)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광주·전남·전북의 150개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진행된 원격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직장인 5647명 몫으로 1006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5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가짜 훈련생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직업 훈련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업장에 보내 대리 출석과 온라인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부정 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가동 중인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기능을 갖춘 자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 기관이 사업장 대신 훈련비를 산업 인력공단에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훈련비를 환급해 준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직업 훈련이 크게 늘고 있지만 훈련생 관리가 웹(Web)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훈련 중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듯 훈련 기관에서 마수료자를 수료 처리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로 수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간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직업 훈련 예산이 무려 1조5000억 원이 넘는 만큼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세계 16억 무슬림은 현재 이슬람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보내고 있다. 이슬람 달력(히즈라력) 9월에 해당하는 라마단은 선지자 무하마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달을 기리는 것으로 올해는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다. 이 한 달간 대부분의 무슬림은 불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수행을 한다.

금식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하고 해가 지면 ‘이프타르’(Ifar) 식사를 한다. 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매일 일몰 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시작하는 첫 식사를 의미한다. 단, 전쟁 중인

라마단

일 라마단을 하루 앞두고는 이집트 남부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 최소 29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테러는 금융·성찰·지배라는 라마단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분노가 라마단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라마단엔 어떤 희생도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길 소망한다.

종사자, 여행자, 노예, 죄수 등이다. 라마단을 맞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9일 장관 공관에서 이슬람권 인사를 초청, 이프타르 만찬을 한다. 외교부는 2004년 이래 매년 라마단 기간 이프타르 만찬을 해 왔다.

하지만 ‘피의 라마단’이란 말도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테러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시리아 내전을 틈타 정부 수급을 잠정한 이슬람국가(IS)는 이프타르를 ‘금식을 깬다’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매일 일몰 후

한 2016년 라마단 기간엔 IS 추종자들의 잇단 테러로 300명 이상이 숨졌다. 지난해 5월16

군인과 임신부나 환자 그리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장거리 여행객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라마단이 끝나면 무슬림은 ‘자카트’를 행한다. 자카트란 이슬람 5대 의무 중 하나로 일 년에 한 번 자기 재산의 2.5%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가족·곡물·공산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자카트의 수혜 대상은 코란에 명시돼 있다. 고아와 가난한 자, 이슬람 선교·교육·문화 사업

/박지석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청춘톡·톡



강소혜 광주대 문예창작과 3학년

이른바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광주 집단 폭행’은 지난 4월 30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30대 남성이 20~30대 남성 8명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대중의 무관심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자의 형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정책’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고, 30만 명 이상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는 청원을 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됐다.

이 사건이 이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가 주택가에서 집단

기 고



김용하 시인·광주지방경찰청 형사조정위원

6월 13일 제 7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전직 대통령이 돌이나 구치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 만나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미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참으로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적 자치로 지방의 권한 강화와 자치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려는 정부의 계획 아래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할 것이다.

지금 집권 여당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적폐의 청산이나 복지 정책 등을 확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사회 부 220-0642 사회 2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 관리 국 227-9600 (FAX 227-9500)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